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 전주 이전 환영”

김광수 의원 “지역균형발전·혁신도시 성공 위해 국감서 촉구한 사항 결실 장애심사센터 또한 핵심 기능 수행 ‘장애심사실’도 신설 등 확대 개편 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 갑, 민주평화당·사진)은 28일, “정부의 혁신도시 시종2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서 확정되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한 사항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 깊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적인 전복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2015년 6월, 2017년 2월 각각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하부조직인 국제협력센터와 장애심사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지역균형발전 실험을 위한 이전 요구와 지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계속해서 이전 필요성에 대한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현재까지 서울 충무로와 잠실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비롯한 상임위에서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잔류하고 있던 심사평가원 산하 8개실 1센터와 직원들을 원전

이전할 계획”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국제협력센터, 장애심사센터 문제에 대해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지방이전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해 온 바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과 2017년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완전 이전하였지만, 정작 국민연금공단의 하부조직인 국제협력센터와 장애심사센터는 정부의 명확한 이전 계획 없이 안일한 대처 속에서 현재까지 서울에 잔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부서는 서울에 남아 있고, 다른 부서는 이전하는 것은 조직 내 위화감 발생은 물론, 나아가 한법과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자부진한 전북 이전과는 달리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심평원은 올 11월까지 아직 이전하지 않고 있던 산하조직 및 직원들을 완전히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이전공공기관간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혁신도시 시종2를 비롯해 전북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 시대적 소명의인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는 28일 중국 강소성 러우 친치엔 당서기 겸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을 비롯한 강소성 방문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역사부터 경제까지 상호교류 증진

중국 강소성 대표단, 전북도의회 방문 새만금 등 지역 홍보·교류 협력 다짐

전북도의회는 28일 중국 강소성 러우 친치엔 당서기 겸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을 비롯한 강소성 방문단과 간담회를 갖고 역사·문화·사회·경제 등의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활발하게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강소성 대표단의 도의회 방문은 3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전북도와 강소성이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양 지역의 우호 교류 분야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내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송성환 의장, 한원수·송지용 부의장, 최찬욱 환경복지위원장, 최영규 교육위원장, 김이재 외교통일위원회장과 러우 친치엔 강소성 당서기 겸 인대주임 등은 이날 도의회 외빈접견실에서 “전북도

와 강소성은 역사·문화·사회·경제 분야에 공통점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장은 “새만금은 앞으로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물류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중국과 한국정부가 경제협력단지로 선정된 곳”이라며 “앞으로 새만금 개발에 있어 강소성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러우 친치엔 당서기 겸 인대 주임은 “강소성은 소수공업원구와 난징 경제기술개발구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면서 “새만금 등 전북지역을 널리 알리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소성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성 기자

당정 “10년 이상 장기 프랜차이즈 계약갱신 쉽게”

공정위, 가이드라인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업계는 10년 이상 된 프랜차이즈 점포 운영자에 대해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교촌치킨, BBQ 등 치킨 업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과 업계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기점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과 프랜차이즈 산업을 살려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최근 자영업 부채가 400조를 돌파해 여당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다”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좋은 성장을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갱신이 10년으로 늘었지만 을(乙)들은 여전히 고단하다. 무자비한 자본 논리로 떠나야 했던 을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점주들의 생존권과 영업권 보장에 큰 힘이 될



을지로위원회 10대 민생법안 통과 촉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과 의원들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을지로위원회 10대 민생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선도적으로 수행하기로 한 통 큰 결정에 감사드린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확산되고 동참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장선 전해철 의원도 “갑을 관계를 10년 이상 되는 경우에 보호 장치가 여러 개 있지만 보호 장치를 법, 제도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며 “공정경제에서 갑을 관계 해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 역시 “계약거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이제는 안정적으로 장사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프랜차이즈에 긍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져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년 이상 장기점포를 운영한 가맹점주는 상권 개혁과 고객 확보를 위한 고객산업의 가치를 제고해오는 가맹본부에 있어 공동투자자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갱신을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결국 가맹사업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1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업계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당정은 이날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해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뉴시스

‘외교기밀 유출’ 강효상 고발

외교부, “비밀엄수 안했다면 의무 위반 사항” 형사고발 결정

외교부가 28일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외교관 K씨와 외교기밀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 K씨에 대한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K씨의 징계는 30일 오전 열리는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K씨는 중징계 중에서도

최상위인 파면이나 해임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또 이번 외교기밀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부차적 문제이고 비밀엄수가 안했다면 의무위반 사항인 것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강경화 장관이 K참사관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꺼망~쑈)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초록은 한반도 깃수도 고창

2019 고창갯벌축제

2019. 6. 7(금) ▶ 6. 9(일) 3일간
고창군 심원면 **만들갯벌체험학습장** 일원 외

지주식김, 동족, 바지락, 풍천장어, 중하, 천일염,
세계적인 갯벌, 경관 등 활용한 다양한 테마프로그램